# 대한언론
Korea Journal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대표전화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kjc1405@kjclub.or.kr

자매 On Line 매체
■대한언론 Knews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10 2026년 10월 1일(목) 제 487호


# 개혁이 개악…李정권 흔들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지지율 30%대 신뢰 급락…레임덕 빨리 올 수도
## 사법리스크 해소 혈안…입법폭주로 민심 역행
## 법무장관 등 인사 참사…'경기성남 라인'도마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15개월 만에 급락했다. 금년 5월 초만 해도 긍정이 60%대를 유지했는데 7월에 50%대를 찍었고 8월부터 급락의 날개를 달았다. 8월 초 조원씨엔아이 조사에선 부정 54.1%, 긍정 42.9%로 민주당 지지율 44.6%보다 낮았다. 9월 초엔 30%대로 수직 강하했다. 무려 30%가 떨어졌다. 갤럽 조사에선 긍정 38%, 부정 57%였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선 긍정 34.7%, 부정 61.9%로 10대에서 7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부정이 50%를 넘었다. 특히 30대는 긍정이 24%에 불과했고 서울은 29%였다. 9월 1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긍정 33.8%,부정 63.3%로 더 내려갔다. 김어준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대로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조기에 긍정지지율 30%대를 기록하는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1년 9개월 만에 정윤회 문건 유출사태로 37%를 기록했고, 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조국일가족 사건을 거치며 처음 39%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원인으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양한 정책현안과 정무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생과 상반된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초부터 민주당이 절대다수 국회의석을 내세워 이 대통령 재임 중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연속적인 입법폭주에 지지율 균열이 시작됐다. 국민다수와 심지어는 진보사회단체까지 반대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 등 사법3법을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다. 여기에 검찰청을 완전 해체했고 서민만 피해보는 보완수사권도 폐지시켰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을 한 것이다.

지지율 급락에 놀란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부동산정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큰 연임에 대해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조작기소특검에 대해선 국회를 향해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 요청한다"며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정에서 공감 여부를 뒤돌아 보겠다"면서 지지율 하락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면서 "방법이 서툴렀지 목표는 변한 적 없다"고 말해 국정기조는 계속 밀고 갈 태세다.

문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개혁·통합이 앞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에 달렸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저항을 느낀 여권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한 듯하더니 다시 민심과 역행하는 일방통행으로 돌아갔다. 대통령 측근인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연임개헌발언'(7월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은 '형사소송법개정'(7월31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높은 세율을 부과한 '세제개편안'(8월3일) 등이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유세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상승을 막지 않겠다"고 공약하고선 부동산이 이 대통령 집권 1년 간 11%로 역대정권 최고치로 오르자 난수표 같은 세금폭탄정책을 내놓았다. 주식의 레버리지 도입으로 개미들만 피해를 입었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지방선거 결과를 본 청와대도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고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만 연이어 드러냈다.

민심이 떨어져나간 시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명청대전의 혈투는 민생대책과 정책비전은 보이지 않고 극언·망언에 파묘까지 집권당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난장판이었다. 이 대통령은 드러내놓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다. 비중 높은 호남 표를 의식해 800조 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단지를 서둘러 발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겼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부채질했다. 보완수사권은 일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겨놓고도 민주당 전당대회 강성지지층을 의식해 슬그머니 발을 뺐다. 과거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권력비리나 대형 참사가 주요 원인이었던데 비해 이 대통령은 메시지의 혼선, 여론과의 엇박자 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신뢰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지지율 급락에 위기를 실감한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으로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이 중도와 실용주의 때문에 핵심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 다시 진보연합 6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발표했다. 너무 현실감각이 떨어진 진단이다. 하락요인은 이념과 노선이 아니라 부동산, 민생, 인사, 도덕성 및 대통령 재판문제 때문이다.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망사'가 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이 꼬리를 이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기생충에 비유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본소득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임상실험에서 실험용 쥐가 죽었는 데도 인체실험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소액주주 피해논란까지 겹쳐 정의·공정·인권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으로선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높다. 용 후보자는 먼저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도 추가의혹이 터지자 자진 사퇴했다. 나머지 4명의 장관 후보자도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면에 계속〉

# ‘자유 항행’ 확보…제한·방어적 파병 결단을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 호가 6월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에 접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던진 이 고뇌가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대한민국, 호르무즈에 파병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질문의 본질은 미국을 도와 이란과 싸우러 갈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민과 경제 생명선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켜 볼 것인가”가 핵심이다.



류종현
본회 편집위원,
전 MBC워싱턴특파원

먼저 파병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파병 반대론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첫째,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진입하면 이란은 이를 미국 편에 선 ‘참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반발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란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호르무즈는 아덴만의 해적 소탕 작전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 단위의 미사일·드론·기뢰·잠수함 전력이 뒤엉킬 수 있는 전장이다. 자칫 작은 충돌 하나가 한국군의 교전과 희생으로 이어지고, 결국 원치 않는 전쟁에 발을 담그게 될 위험이 있다.

셋째, 파병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동맹의 청구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군대의 해외 파병은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헌법이 해외 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호르무즈를 통한 국내 원유수입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바다가 막히면 대한민국의 심장도 멈춘다. 이 고통을 미국이 혼자서 감당해 온 것도 사실이다. 동맹이 깨지고 국익이 침해돼도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자는 말인가.

호르무즈는 지도 위의 먼바다가 아니다. 우리 산업과 국민 생활에 연결된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다. 그곳의 안전이 흔들리면 유조선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유가와 물류비가 뛰고, 기업의 생산원가는 올라가며, 그 충격은 전기료, 물가 인상 등의 파도로 일렁거리며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생활고로 이어진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원초적 책무라면, 외교적 성명과 우려 표명만으로 나라가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변명할 수 있나. 그동안 언론이 “국익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능력이 있어야 지켜진다.”며 대문짝만하게 인쇄해 왔던 것들이 그저 대중 달래기의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말인가.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세력이 홍해 연안을 따라 세력을 확대하고 바브엘만데브 전략 거점까지 위협하면서 세계 해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섬뜩한 그림이 나타난다. 동쪽에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에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의 출구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만약 두 전략적 수로가 동시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와 물류 흐름 자체가 위협받는 것과 같다. 얼마 전 일본을 다녀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물론, 핵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판단 기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눈치 보기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한 우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란을 응징하기 위한 전투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수로에서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기뢰를 제거하여 우리 유조선의 항행 자유를 지키는 주체적 결정으로 압력과 협박을 물리쳐야 한다.

전쟁에는 신중하되, 우리의 바닷길을 지키는 데는 주저하지 말자는 것이다. 파병한다면 목적과 작전범위를 명백히 제한해야 한다. 이란 본토 공격이나 지상전 같은 공격적 전투가 아니라, 기뢰 탐색·제거, 군수지원, 구조·구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 지휘 아래 들어가는 형식보다는 파병한 국가들이 다국적 연합군의 해상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는 걸프전 종군기자로서 미국이 최단기간 내 확실한 승전을 이끌어낸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병이 아니라 후방과 의료지원 역할로 멋진 승리를 함께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걸프전 파병에 적국이 토를 단 적도 없거니와 파병의 명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쟁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위적 국익 수호와 국제 항행의 자유와 보호에 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혹여 적의 미사일 공격 등에 자위권을 수행하는 전투가 전개된다 해도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미동맹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동맹국에 일정한 역할을 요구할 때 무조건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이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국제동맹 외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동맹은 맹종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맹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우리의 파병이 적국조차도 결코 비난의 입방아에서 차단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파병의 대원칙이어야 한다.

〈1면에 이어서〉

문제는 이런 위기를 맞고도 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가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폭주를 자제할 수 있는 가이다. 이 대통령은 지지층보다 민심에 귀를 열고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보다 국정에 진정성을 갖고 효과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인사 실패만해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걸로 덮일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른바 ‘비선조직’이라는 경기·성남라인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억지(抑止, deterrence)보다는 이상주의적인 평화공존 강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영토 주권(제3조) 수호 의지 약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 및 최전방 경계의 이완, 대북 억제력 저하라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李대통령, 일방적 北 유화 … 안보 위태위태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출범 후 '北체제 존중'등 정책은 시대착오
## 核 미해결 속 협력기금 1兆편성 논란 불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고 공화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 우리의 원쑤를 단호히 징벌하고 미국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결정과 함께 서해북방한계선(NLL)불인정, 경의선의 물리적 단절과 조국통일 3대기념탑 철거 지시를 내리면서 한 대남·대미 협박성 발언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날인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전해졌다. 김정은은 앞서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주적 관계로 규정했다.

핵무기를 동원한 김정은의 대한민국 불법 무력통일 발언이 전해진 2024년 1월 1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평화는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평소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적대하고, 대결하며,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지를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김정은의 대한민국 무력통일 위협발언 배경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말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은 일찍이 매국노로 지목된 이완용의 발언으로, 일본의 대(對)조선 전쟁·점령으로 인한 조선인들의 굴종·노예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하여 비판을 받았다.

더 개탄스러운 대목은 이틀 후인 1월 19일 이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존칭어 표현을 쓴 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김정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평상시 친북·종북 의식을 갖고 있던 것을 무의식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에 따르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라고 하는 표현은 북한에서 이들을 '선대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마련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대북 전단 살포 제한, 확성기 방송 중단 ▲9·19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민간의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등을 핵심 성과 및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 8월 "앞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겠다"며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체제 존중'은 무엇보다 북한 헌법에 지배(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된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과 전체주의 유일세습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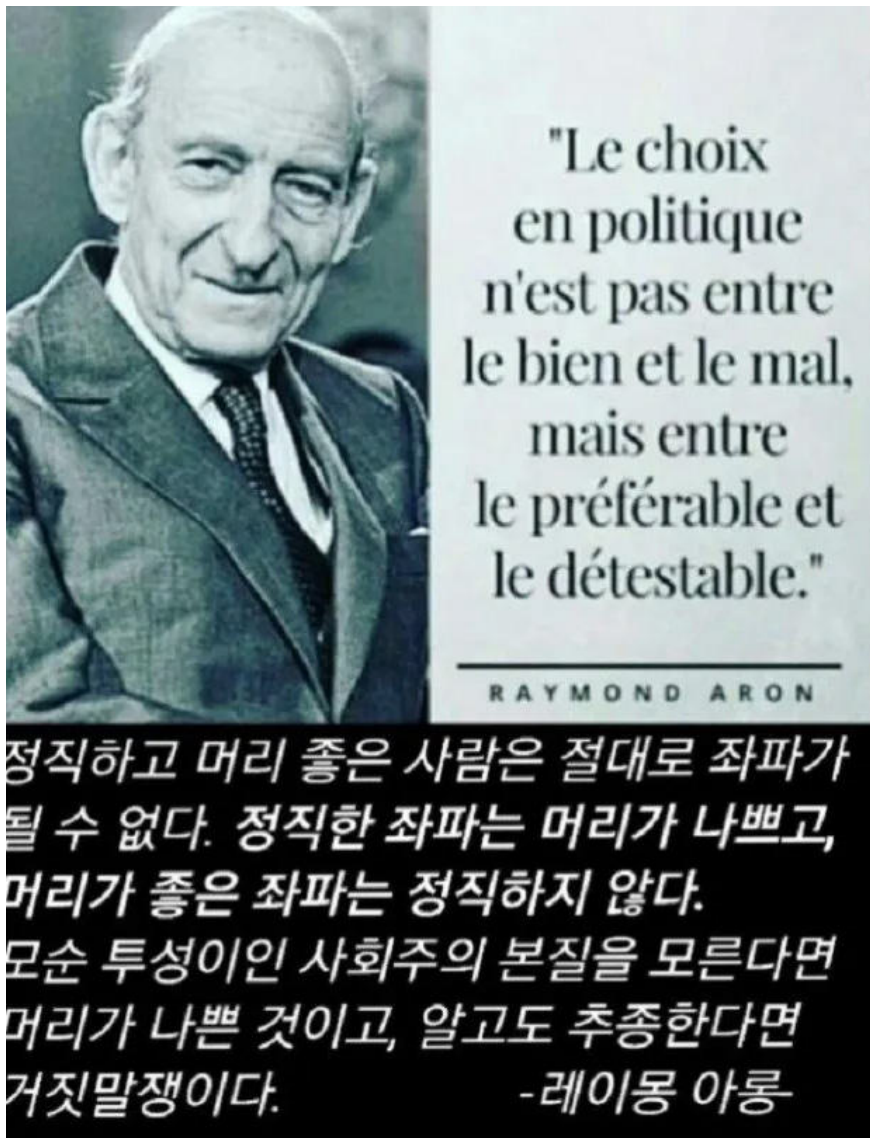
즉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세습 통치체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한민국 통일목표인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평화공존은 우리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의 노예상태, 인권탄압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 체제 존중은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침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적대행위 없음'을 정책의 전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선제적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도 북한의 상응조치가 따르기 전에 한국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먼저 취할 경우 우리군의 감시·훈련·대응능력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 대북 접촉 전면 허용도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 정권과 연결된 인물들과의 접촉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보를 해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다시 확충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약 1조 2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 재원을 크게 늘리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의 판단 기준도 정치적 자주성이나 상징성이 아니라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C4I), 미사일방어(MD), 정밀타격, 연합작전능력,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이어야 하는 데도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에 완료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의 통일교육도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 제4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즉 '평화통일'은 통일의 수단 또는 방법일 뿐 통일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통일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들어 통일부는 2026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통일의 출발점은 평화」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치 통일목표가 평화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정부가 통일교육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통일의 수단과 목표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군사적 위협 중단에 대한 실질적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 유화 제스처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므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엄중하고 원칙 있는 안보 태세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 좌파, 각계각층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들



좌파를 신랄하게 비판한 세기의 지성 레이몽 아롱(1905~1983).

## 억지 폭언의 명수…상식 도덕성 무시
## 서민 위하는 척 빨대 꽂는 이중인격자
## 자본주의 혜택누리고 대한민국은 부정
## 反美외치며 자식은 美유학보내기 혈안

서구의 좌파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제도 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우리 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폄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간첩사건, 북방한계선(NLL)침범과 군사분계선(MDL) 도발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전체주의 유일세습체제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대남노선을 성실히 추종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인권탄압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좌파가 취한 입장이나 언행을 보면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좌파 중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물론 모든 좌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혁명과 국가발전 과정에서 좌파가 성취에 기여한 평등의 가치와, 소수자와 피억압자에 대한 해방노력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이비 좌파'도 많지만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진정한 좌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 좌파들은 '위선의 집합체'로 보인다. 적어도 그런 인식에 싸여있다.

무엇보다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들이다. 조지 오웰은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In a time of deceit telling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라고 했다. 흔히 좌파의 속성을 의미하는 '위선자'는 영어로 'hypocrite'이라 한다.

옥스퍼드 사전 등 유명 영어사전에 나와 있는 'hypocrite'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언행이 이율배반적인 사람' '겉으로만 착하고, 도덕적인 체 위장하고 실제 마음으로는 악함과 비도덕성을 품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의돼 있다. 'hypocrite'의 동의어로는 deceiver(사기꾼), liar(거짓말쟁이), pretender(…인체(겉치레)하는 사람), cheater(欺瞞者), disembler(속마음을 숨기는 자), faker(僞造者), imposter(협잡꾼) 등이 나와 있다.

이들 좌파의 성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억지와 폭언의 명수들이다. 상식과 도덕성을 무시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설사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틀리고 나중에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사과하지 않으며 또 다른 구실을 찾아서 사실을 변경, 왜곡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믿어버린다. 오죽했으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공산혁명으로 성취시킨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거짓말도 충분히 자주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외쳤을까.

이들이 말하는 진실이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진실, 즉 '이기적 진실'(selfish truth)이다. 이들은 편 가르기의 명수다. 사람을 적과 동지로 나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철학자 포퍼(Karl Popper)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주의 이념은 인간의 주요 문제를 푸는 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partner) 대신에 '적'(enemy)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적'을 뉘우치게 하고 '사랑'의 힘으로 포용하며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폭력으로 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통해 타도되어야 할 적으로 자본주의의 부루주아를 지목했다. 그들은 '책임' 대신 '증오'를 선택했다.

'20세기 지성'이란 평가를 받은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스탈린 체제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정당화하는 지식인들의 위선과 지적 불성실을 비판하면서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해 좌파 사회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보편적으로 오늘날 좌파에 쏟아지는 비판 중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몇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첫째, 좌파는 정의와 공정, 평등을 외치며 가난한 서민을 위하는 체 하지만 행동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기회를 빼앗고 서민을 죽이는 치부를 일삼는다. 둘째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 파괴를 정의라고 착각하며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주장하면서도 불리하면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한다. (강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 반미 기치를 높이 들면서도 미국을 못가 안달한다.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면서도 반미운동에 앞장서고,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본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내전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GDP대국, 세계 8위 수출 강국, 세계 6위 군사강국 반열에 올려 놓음으로써 위대한 진보를 이룩한 주류층을 수구(守舊)라고 매도하는 것도 그들이다. 국민의 99%의 흙수저(프롤레타리아)로 다수세력이란 점을 대중에게 믿게 만들고, 99%의 흙수저가 1%의 기득권 금수저(부르주아)를 혁명으로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라 등등.

한국 '좌파'의 역사와 연원,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만 좌파의 속성, 특히 그 위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이해를 통해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낭비를 막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서옥식(본회 부회장 ·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 “美서 반도체 만들라” 관세로  압박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7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왼쪽 두 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완제품까지 부과…중간선거 겨냥 목조르기 수준
## 한국 ‘메가 프로젝트’ 차질 안돼…대응 치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도체 제품과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을 겨냥, 고강도 표적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투자를 유인하는 모양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안 만들면 ‘표적관세를 각오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나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임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초강국이어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우려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대 시장 진입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표적화(targeted)되고 신중한(thoughtful)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루트닉 장관은 이어 미국 내 투자에 비례해 관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설계 중이라며 “TSMC와 마이크론만 합쳐도 5,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총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생산 투자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2% 미만이던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검토 안은 단품에 그치지 않고 노트북, 게임기,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를 대폭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별 관세율과 할당량을 설정했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번 방안은 침체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지만, 과연 이 정책이 미국이 내세우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AI 산업의 꽃이며 핵심 인프라다. 엔비디아와 AMD, 퀄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도 막대한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AI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 비용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높은 관세 부과로 비싸진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구축비용을 높이고, AI 서비스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비용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때문인지 미국 내 여론은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에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또 반도체 공급망은 어느 한 나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설계는 미국이 강하지만 제조와 장비, 소재, 패키징에서는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협력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제시한 뒤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또 압박이나 회유에 굴복해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자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일이다. 미국의 주장을 듣다 보면 한국 기업들이 마치 미국 내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도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 투자에는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AI 열풍으로 HBM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업황은 언제 다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정치적 압박 때문에 기업이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시장이 꺾이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반과 AI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동맹국을 압박하는 관세정책부터 재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 해법 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알아서 투자하게 된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투자 압박 등 강경 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자칫 고용 창출도 실패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도 관심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해 10월 관세 협상을 할 때 이미 (미국이) 그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의 원칙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는 생물이다.

어제의 입장이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미국의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시점, 적용 품목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일이 어렵게 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론 치밀한 대응책 마련은 필수다. 무려 4,700조원이 투자되는 국내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미국의 투자 압박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 李대통령,北 '先비핵화 정책' 폐기

# 국민의 생명 김정은 核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호
본회 신문편집위원장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先)비핵화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북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 한다"며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선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양국 정부가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북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제재는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 추산으로 북은 매년 10~20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췄고 이미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핵 개발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이 북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북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며, 이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북이 이미 핵을 보유했으니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좌파 일각의 '북핵용인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다. 그것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나라가 직접적,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이 '선 비핵화'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

북은 최근(9월)에도 국제원력기구(IAEA) 총회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매해 이 맘 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나오는 잡음일 뿐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북한을,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한 존재로 합리화시켜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당위의 측면이나 정책의 실효성(實效性)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비핵화 노력은 노태우 정권(1988~1993년)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해도 거의 반세기에 이른다. 노태우 정권에서 7·7 남북선언으로 시작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선언,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좌파, 우파 정권을 가리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다.

## 韓美50년 대원칙 깨져…핵 보유 인정 파장 거셀듯…'차 멈춤'은 언어의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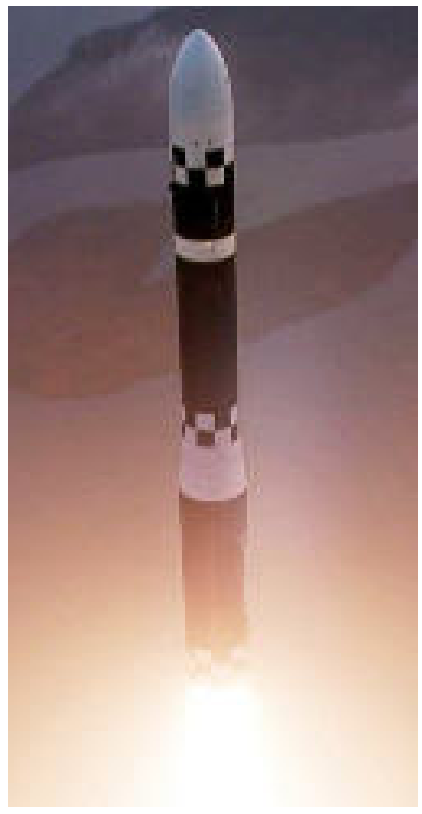
이 대통령의 '선 비핵화 포기' 언명은 이런 노력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논거를 '현실주의'에 두었다. 현실적으로 선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를 앞세워 보수정권을 압박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이 '햇볕정책'의 우산 아래서 대화와 화해를 얘기했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을 대결주의자로 몰았다. 그 결과가 오늘의 북핵이다. 이들은 이제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선(先)비핵화 포기를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피해가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상황까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다.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상대가 차를 세우기는커녕 차를 몰고 나올 생각 자체가 없다는 데 어디를 향해 무슨 정지신호를 보내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물론 좌파, 우파 모두 차분해졌으면 한다. 북핵문제는 초기에 해결될 수도 있었던 시기를 놓쳤음을 인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모두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다른 정책들, 다른 현안들이 잘 풀리지 않아 일종의 돌파구로 남북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기점검이 있어야 한다. 정책결정의 양면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외적 갈등의 심화는 공동체의 내부갈등으로 전이되게 마련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조장하고서도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위정자들부터 반성했으면 한다. 한 번 잘못된 길로 갔으면 뒤늦게라도 바른 길로 나와야 한다. 적어도 멈춰 서서 상황을 재점검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주문한 '멈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일 터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2024년 10월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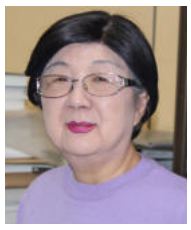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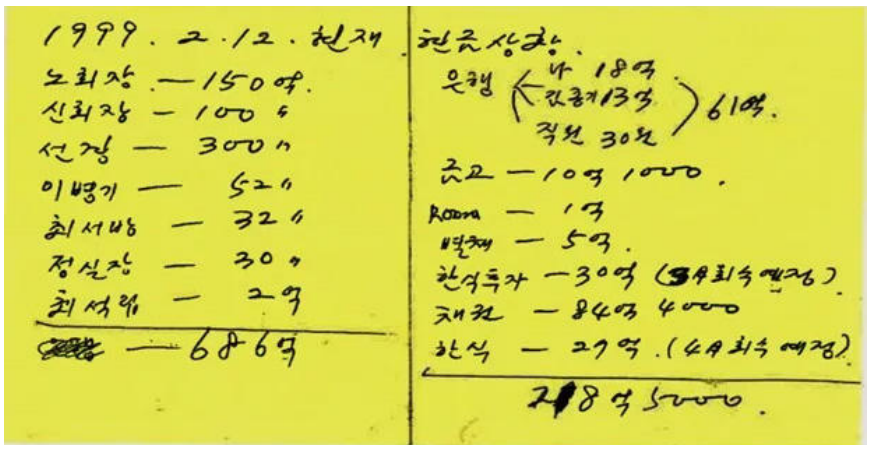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2025-2026



# 노소영, 아버지 비자금에 발등 찍을판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검찰이 압수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적힌 비자금 의심 내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최태원과 이혼 소장에 300억 적시 단초
## 불법자금 환수법 내년 발효 추징 가능성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반도체 최대 재벌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에 벌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이 여전히 화제다. 10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혼 허락과 함께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을 분할해 9천440억 원을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까지 일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작은 2015년 최 회장이 연인 관계였던 김 모 씨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최 회장은 2017년부터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이유는 이혼 사유가 본인의 과오와 책임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혼 청구소송 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책임과 과오가 있고 상대 배우자가 원치 않으면 이혼 허락 판결이 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소송으로 지친 노 관장은 결국 이혼에 동의하고 2020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에 응했다. 이 소송에서 2024년 부부는 이혼 확정과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이혼했고, 재산분할 문제만 떼어서 다시 상고심을 청구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돈은 즉시 현금으로 주되 미지급 시 연 5%라는 고금리로 계산해서 하루에 이자만 1억 3,000만 원씩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

최 회장은 전액 현금 지불은 어렵고 일부는 주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은 거부했다. 최 회장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청구했다. 9월 11일 최 회장은 한 발 물러선 듯 7,000억 원은 지급하겠다면서,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런 거액이 거론된 것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딸(노 관장)의 결혼 후인 1991년 당시 사돈이며, 최 회장의 부친이었던 선경그룹(현 SK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주어서 경영을 도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자신도 간접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했으니 그 공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

그런 '거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된 것은 당시 300억 원 상당의 SK 주식 가치가 그동안 크게 늘어난 탓도 있고, 변호사들의 도움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왜 일반인이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을 청구했을까. 현직 대통령의 딸로서 결혼했다는 자존심이 남편의 외도로 박살난데 대한 분노와 복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번번이 소송이 기각됐는데도 끈질기게 소송을 되풀이한 최 회장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질렸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소장(訴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주었다는 부분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단초가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8월 21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이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 전대통령 전직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록으로 추정되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도 압수했다.

이 메모에는 ▲최종현 전 선경회장 300억 원 ▲동아시아문화재단 152억 원▲차명으로 보관한 듯 의심되는 210억 원 ▲기타 904억 원 등 모두 1천266억 원의 출처와 용처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동아시아문화재단이 비자금 세탁의 통로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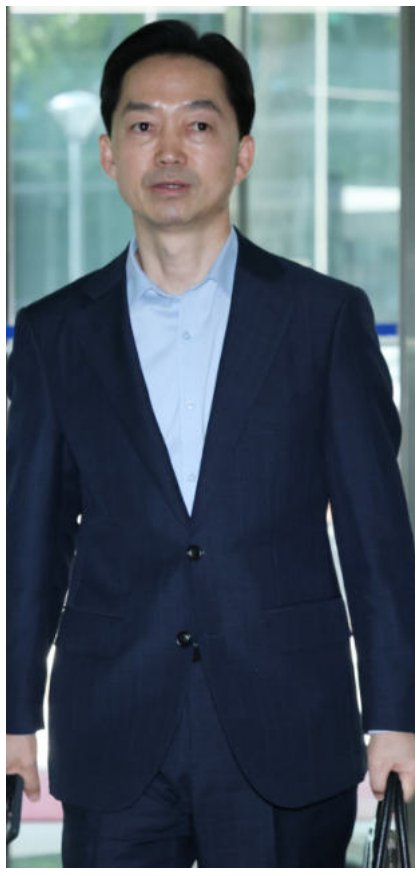
노태우 정권은 '뇌물 공화국', '재벌 공화국'으로 불렸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40여개 기업으로부터 각각 50억 ~ 350억 원씩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1995년 가을 여기 저기서 폭로됐다. 그는 그 해 12월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했다며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결국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2천628억 원을 2013년까지 완납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사로 석방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딸 노 관장의 재산분할 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검찰은 노소영, 노재헌 남매를 소환하고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비자금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 자금인 게 입증되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했다. 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발효된다. 비자금 행방을 찾기만 하면 내년에는 추징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행방을 찾는 대로 우선 자산 동결에 나설 방침이다. 고인은 지하에서 또 한 번 명예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 중수청, 출범전 삐걱삐걱…제기능 할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제공〉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작업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 국민이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가 새롭게 출범했는 데도 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 거취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 9월 7일 제청됐으나 국회에는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문제에 대해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필요한 태도다. 그러나 사과와 재점검 약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은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두 핵심 축이다. 두 자리의 인선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정부가 중수청 출범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행안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으며, 나머지 한 명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는 오히려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기소에 반대했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보호대책 없는 제도변경이 초래할 수사 공백을 우려한 취지였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불기소 처분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됐다는 점도 '친윤 인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만으로 후보자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재고 성명에 참여한 전력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실제로 반대했다면 공식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반론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후보자의 유리한 정황만 골라 설명하면 검증이 아니라 사실상의 방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초대청장 인선 놓고 여권 옥신각신 답보 상태
## 정치중립·독립성 화두…공소청과 역할 정리도

더욱이 중수청장 인선의 판단 기준을 '친윤이냐 아니냐'로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와 능력,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검찰과 구별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조직문화를 세울 리더십이다.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검찰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새 기관에 그대로 옮겨놓을 위험이 없는지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 간판만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바꾸고 사람과 관행, 권한 행사 방식이 그대로라면 개혁의 의미는 퇴색한다.

중수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간부 인사와 수사부서 편성, 사건 배당의 체계 구축이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맡던 중대범죄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넘길지, 경찰·공소청과는 어떻게 협력할지, 진행 중인 수사와 압수물·수사기록을 누가 책임질지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일만 맞추면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 인선의 불확실성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새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체제를 정착시키고 중수청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 검찰개혁의 정책 방향과 집행 책임마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일정에 쫓겨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를 밀어붙인다면 새 제도는 출범하기도 전에 정당성과 신뢰를 잃게 된다.

중수청 출범은 단순한 정부 조직 신설이 아니다. 78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다. 그 성공 여부는 법률의 문구나 출범 기념식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개혁은 날짜를 맞추는 행사가 아니며, 준비되지 않은 출범은 개혁의 명분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인선을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검증을 바로잡고 제도의 공백을 막는 책임 있는 결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25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대법관 임명도 '明픽'…3권분립 훼손

## 대장동 김만배 무죄 선고한 판사 후보자 천거
## 남편은 憲裁재판관, 이해충돌에 특혜도 다분
## 조 대법원장 "어떤 난관에도 사법권독립 수호"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10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 절차가 없었다"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적은 이승만 정부 때 딱 한 번 있었고 현 헌법체제에서는 처음이다. 이로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정면 충돌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사전 조율한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와는 다른 인물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조율에 실패해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제출도 대법원 행정처장은 청와대 비서실과 상의했다고 국회에서 밝혔고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손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이 대통령이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손후보자를 제외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윤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 한 명을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 태도 같다. 조희대 씨 당장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함 대신 씨라고 부르며 거칠게 사퇴를 압박했고 민주당도 최근 한 달 새 여섯 차례 공식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기차게 압박해 왔다. 9월 13일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재 제청하라"며 "그럴 뜻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 씨에게 1심 유죄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였다.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도입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법제도에서 대법관 아내, 헌법재판관 남편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례도 없고, 국민 눈에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상훈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자 고위법관이던 동생은 사직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선택적 반려는 사법부가 대통령 하부기관인 것처럼 비치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박탈한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후보를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3권 분립에 엄연히 위배된다. 현 헌법체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권 분립의 균형을 명확히 세워 놓았다. 9월15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사전협의 관행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이뤄질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헌법·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 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렇다면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법문상 명백하다.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의혹제기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2주 만에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했다. 법이 이런데도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제청방식까지 관여하고 있다. 청와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도 여권의 월권적 압박이 계속되는 것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후보자로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압박에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9월11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모든 법관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두려움 없이 재판하라"면서 사법권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위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명백하게 나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려고 한다. 위헌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 화(본회 이사·편집위원)

# ‘민·청·추’ 3각 갈등…민생보다 대권?



유한준
본회 부회장
시인·수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이른바 ‘민·청·추’(김민석-정청래-추미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 중진들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대권 전초전이 이미 시작된 걸로 보기도 한다. 정치권에 밝은 한 인사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제공〉

그는 한 예로 6·3지방선거 관리 부실 등에 대한 2030세대의 분노를 들었다. ‘올공’(올림픽공원에 모인 지방선거 관리부실 항의 집회 참여자들) 시위에서 드러나듯이 “요즘 젊은 세대는 여러가지 이유로 극심한 분노에 차 있다”면서 “그들의 분노가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와 30대의 긍정평가는 28.7%, 34.8%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62.3%, 59.9%로 거의 배 가까이 높았다. 여권으로선 지지율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판인데 정권 핵심들끼리 이전투구나 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걱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과 여권이 넘어야 할 현안들은 초헌법적인 ‘검찰개혁의 혼선’ ‘부동산정책의 난맥상’ ‘개각인선 부실논란’ ‘공소취소·연임개헌논란’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 여파로 2030과 노년층을 넘어 중도층, 진보층의 이탈까지 두드러지고, 국정신뢰도 추락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민·청·추’ 3각 갈등은 여기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오만한 모습을 더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차기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민심의 경고장으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들도 없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 ‘노무현 탄핵전조와 비슷하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흘러 나온다. 그럼에도 그들만의 권력투쟁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 마디 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격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되받아 쏘는 3자 치고받기 양상이다. 김 대표는 최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前兆)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1년 차에 벌어진 신·구주류 간의 갈등에 따른 내부분열로, 민주당 분당과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던 과거사를 꺼낸 것이다.

이에 앞서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전 대표 측도 검사정원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언제든 검찰이 부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다 친노·친문 세력과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시민·김어준까지 이 대통령에게 ‘구조적 다수’ ‘실용주의’ ‘중도· 보수 외연확장’ 등의 언사를 구사하며 여권 내 노선투쟁에 부채질을 했다. 대통령을 향해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여권 핵심 지지층을 챙기라고 했지만, ‘어물전 썩은 내’ ‘필패론’ 등의 거친 말로 독설을 쏟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연합뉴스 제공〉

이에 친명계가 발끈했다. “정권 2년 차에 이렇게까지 내부에서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느냐”고 날을 세운 것. 친명계는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친명의 한 핵심의원은 페이스 북에서 추 지사를 향해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내쏘았다. 이에 강경파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맞섰다. 첨예한 시각차와 함께 계파 간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못하는 게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보완 수사권처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시스템마저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게 비근한 예다. 이런 자중지란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논란·부동산 파동·연임개헌·공소취소·호르무즈 해협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개혁과 민생,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고 국정신뢰를 회복하려는 소통행보의 일환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말 그대로 산적한 국정 현안 앞에서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차기 대선은 아직 멀다.

## 만보회, 서대문 형무소서 제25차 걷기 대회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9월18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25차 걷기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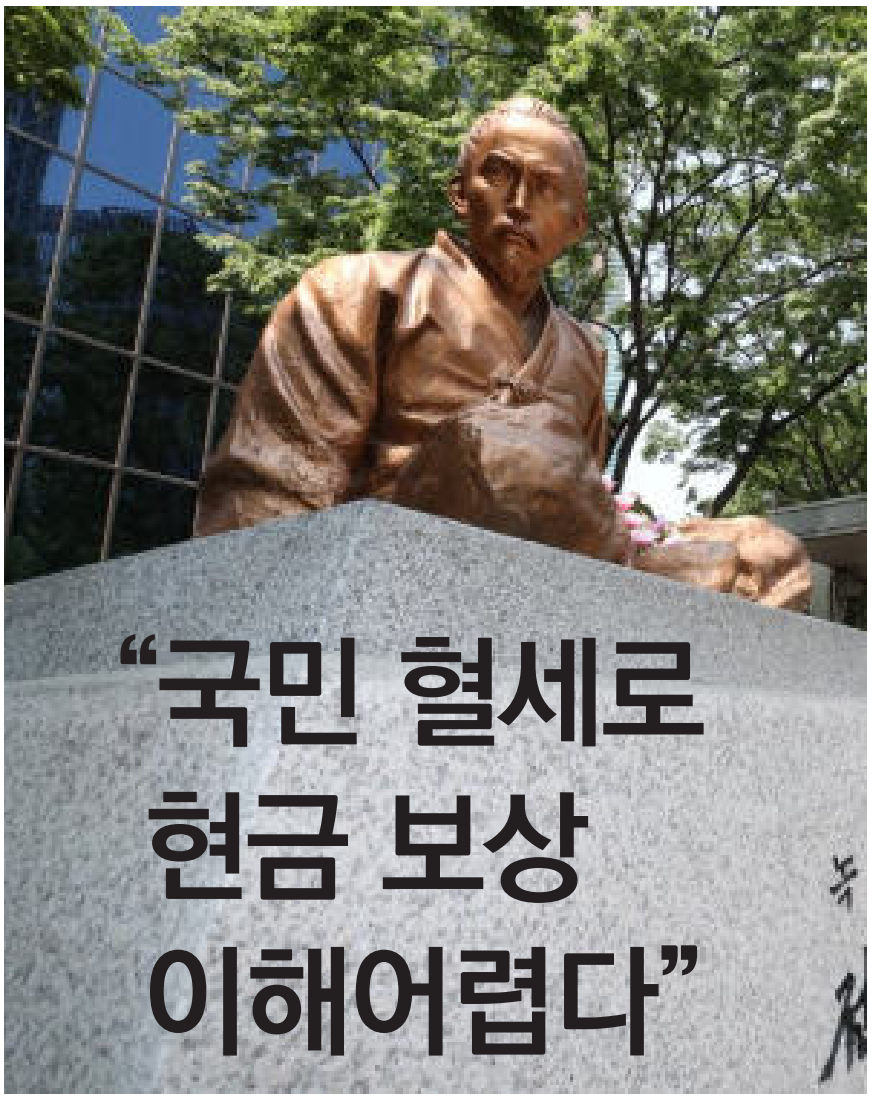
이곳은 대한제국 말에 일제의 강압으로 감옥이 지어져 8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일제의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현재는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을 기리는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이날 1시간여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밟으며 그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강두모, 김윤찬, 김조영, 박종서, 설임윤, 안종우, 안홍렬, 장 옥,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 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연120만원 수당 지급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서울 종로구 종각에 있는 전봉준 동상. 〈연합뉴스 제공〉

## 역사적 비극 바로잡고 예우해야
## 입증자료 부족…정당성에 논란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조선조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수탈 행위에 시달리다가 부정부패 척결이란 기치를 들고 전라도 고부(현 정읍시)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유네스코에서 반봉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봉건 왕조라는 시대적 운명에 맞서 관군과 싸우다가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한 농민군의 자손들은 오랜 세월 ‘역적’ 또는 ‘반란군’ 후손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며 묵묵히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록 유족에게 2026년 하반기부터 매년 120만 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자 이러한 계획의 정당성을 놓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의 수당 지급을 찬성하는 측은 “역사적 비극을 바로잡고 지자체가 늦게나마 예우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제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을 거치며 왜곡되었던 동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격려하는 당연한 책무”라고 반긴다.

반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1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조선 말기의 불충분한 인적 기록으로 인해 유족 입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엄격한 서류 검증을 거치는 국가유공자 심사에 비해, 집안의 구전 내력, 문중 족보 등에 의존한 심사도 배제하기 어려워 자칫 자격의 정당성 논란이나 부정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94년에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임을 자부하는 전북도가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후손들이 긍지를 갖도록 유족 수당을 입안한 근거는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등장하기 4년 전인 2000년부터 정읍시는 독자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참여자 후손을 찾아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 지자체에서 시작한 유족 수당 지급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전체 차원으로 규모가 넓혀진 것이다.

동학혁명 유족 수당을 전북도가 공개적으로 확장하면서 찬반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항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1조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후략)’로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 후 태어난 70~80대 대다수는 역사 과목에서 ‘동학란’으로 교육받아 동학농민군에 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점도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다.

당시 동학군의 투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차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황룡 전투를 통해 큰 승리를 얻고 전주성까지 점령한 민중 봉기 형태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자국민 보호라는 핑계로 개입하자 해월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 지도부는 ‘척왜창의’라는 깃발을 들고 2차 출진령을 전국에 내렸다. 당시 전봉준, 손병희, 김구의 지휘로 전라, 경상, 충청, 경기, 황해, 강원까지 동학농민군이 일어나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전북도가 산하 시·군과 3대7의 비율로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1년 이상 도내에서 거주하는 증손자며 유족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월 10만 원의 수당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얼굴도 모르는 조상 덕분에 증손 세대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현금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업무를 전담하는 국가보훈부는 법률에 따라 공훈 당사자의 손자녀만을 유족으로 인정하지만, 중앙정부도 아닌 일부지역 지자체가 증손자녀로 1세대를 높인 것은 국가 행정의 공평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유공자의 등록 과정은 치밀하다. 신청자에 대한 사건과 수형기록, 언론기사 등 누구나 납득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보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독립운동 포상을 신청한 대상자 중 약 8%만이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동학농민혁명의 시기는 조선왕조 말기였다. 철저한 신분사회 제라서 양반 계급이 아니라면 호적 등 인적사항 기록이 허술하거나 난리통에 불타 핵심 인물 외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동학유족신청서를 심사하여 723명의 손자, 증손 세대에 수당을 준다고 발표한 것이다. 혹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집안의 구전이나 문중 족보도 제출하도록 여유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오히려 공정성과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지자체 단독으로 현금성 수당을 신설할 경우, 타 지역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지역에서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동학 조직을 통해 전국적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이라 일부 지자체의 수당 지급이 다른 지역에 경쟁적으로 확산한다면 중구난방식의 혼란이 벌어질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와 ‘현금 수당 지급이라는 행정 정책의 적절성’은 엄연히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학 정신의 명예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개별 후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이라는 혜택으로 다룰 때는 국민의 이해는 물론, 중앙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완결성이 뒤따라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명예 회복은 특정 유족만을 위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어야 한다.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운 행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결합할 때, 그 시절 들불처럼 일어섰던 농민군들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날 우리 후손의 가슴 속에도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美 독립250돌 전세계 메시지



서상문
한국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본회 회우




미국 러시모어산 전직 미 대통령 4명 조각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2026년 7월 3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Mount Rushmore)에서 열린 독립 250주년 전야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미국 내부의 이념 지형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전략적 함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이념적 공세를 차단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공산정권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기하고 자유세계의 결속을 촉구하려는 사상적 투쟁이기 때문이다. 75년 전 6·25 한국전쟁의 포연 속에서 미국 의회에 울려퍼진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원수의 경고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1951년 4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임당한 뒤 미국으로 귀국한 맥아더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 단상에 섰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전황보고나 국지적인 ‘북한 및 중공의 남침 저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해임 이전부터 주장해온 공산주의의 본질과 세계전략에 대한 신념을 집약한 고별 연설이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의 한 구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지역들도 따라서 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화정책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항복하면서 유럽에 진출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큰 실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두 지정학적 전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글로벌 연쇄성’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맥아더는 특히 중공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이 ‘새로운 전쟁과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유화정책을 쓰거나 타협하는 것은 더 큰 실패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의 영향과 팽창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전쟁의 목적은 ‘결말이 나지 않는 전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승리’에 있으며, 유화정책은 결국 더 큰 전쟁을 낳는다고 믿었다.

## 맥아더 원수 “毛등에 유화책은 도미노赤化 자초”
## 백악관 ‘反共선언’…붉은 깃발 꺾어야 평화 도래

그러나 이러한 맥아더의 전략적 인식은 이미 해임 이전부터 워싱턴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4월 11일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은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 등 모든 직책에서 해임했다.

이유는 맥아더가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지 못했으며, 군 지휘관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의 개입과 유럽 동맹국들과의 균열을 두려워 했다. 트루먼에게 한국전쟁은 남한으로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제한전’이어야 했다. 반면 맥아더에게는 북한을 공산 지배에서 해방하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꺾을 기회였다.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다른 결론도 가능하다. 만약 맥아더의 구상대로 중국 연안 봉쇄와 전략적 타격을 통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면 어찌 됐을까?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즉각 응전했겠지만 낙후된 중공전력으로는 첨단의 미국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냉전시대의 극한 이념대립과 수많은 대결적 참극을 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시아에서 확전을 피하려던 트루먼의 결정은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했고,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정권을 남겨두었으며, 중공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할 시간과 공간을 허용했다. 따라서 맥아더 해임은 자유세계의 장기적 안보를 저해한 중대한 역사적 실책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75년 전 맥아더의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21세기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와 강압은 과거 맥아더가 경고했던 중공의 팽창성과 맞닿아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차이나 파워(China Power)’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중국군의 활동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일본 주변 등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대만 주변에서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전년 대비 22.4% 증가한 3,764회에 달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군의 활동이 16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단순한 국지적 마찰이 아니라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허물고 자국 중심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강제하려는 야욕의 발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공선언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공산주의체제 자체를 제어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맥아더의 통찰이 오늘날 다시 정당성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과거 트루먼 행정부의 ‘제한적 대응’과 ‘유화적 타협’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맥아더의 해임이 가져온 역사적 파장을 기억해야 한다. 타협과 제한적 대응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방치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지금 자유세계에 필요한 것은 위협의 본질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결연한 대응이다. 우리는 전체주의의 팽창성과 자유의 취약성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같은 질문을 더 혹독하게 다시 제기할 것이다.

# 귀족과 평민, 어휘·악센트 완전 딴세상

특파원 수첩 런던 18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공주 영상 정보대학 교수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

런던 한복판 시장 통에서 꽃을 파는 엘라이자는 거칠고 저속한 노동자 말씨를 쓰는 가난한 처녀. 사투리를 채집 중이던 언어학자 히긴스 교수가 우연히 그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장담한다. "내가 저 여자 발음을 제대로 고쳐서 6개월 안에 상류사회 숙녀로 만들겠다." 친구인 피커링 대령과 내기를 하고 엘라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히긴스는 혹독한 교육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엘라이자가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히긴스와 끊임없이 다투지만, 피나는 훈련 끝에 영국 상류층의 예절과 우아한 영어를 구사하는 숙녀로 변신한다. 히긴스가 중간시험 삼아 데리고 간 고급 사교장 아스콧(Ascot)경마장에서 엘라이자는 숙녀처럼 성장하고 뽐내며 등장한다. 그러나 자기가 베팅한 말이 뒤처지자 흥분, 무심코 하층민 악센트에 저속한 어휘가 마구 튀어 나왔다. 순간 주변의 귀부인들이 경악하며 박장대소. 격식 있고 우아한 귀부인 행세를 하던 엘라이자가 경마 열기에 휩싸여 본색을 드러내며 '엉덩이', '빌어먹을'과 같은 비속어를 내뱉는 바람에 좌중이 충격에 빠진다. 영화의 대표적인 명장면이다. 이후 더욱 강훈련을 받은 엘라이자는 런던의 외교관 무도회에 참석, 마침내 완벽한 귀족 여성으로 등극한다. 야채와 청과물 판매로 새벽부터 시끌벅적한 코벤트 가든의 꽃파는 아가씨가 귀족들 저택과 고급 클럽,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부촌, 메이페어(Mayfair)숙녀가 된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1964)는 런던 하류층 여성이 말투와 교양을 교육받아 상류사회 숙녀로 변신해가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리스 신화를 그린,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언(Pygmalion)'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 말은 기대와 믿음이 실제로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교육심리학 용어) 가냘프고 청순한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부르는 노래, '나는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었어.'(I Could Have Danced All Night)가 인기 절정이었다. 자신이 히긴스의 실험 대상이 된 것을 알아챈 엘라이자는 교수의 집을 뛰쳐나가고 뒤늦게 그녀의 빈자리를 느낀 교수는 결국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계층과 성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와 말씨, 악센트가 판이하게 다르다. 억양뿐 아니라 리듬, 음높이, 말속도도 다르다. 그래서 말씨만 들으면 출신 성분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양쪽 끝에 있는 영어가 포쉬와 코크니다. 포쉬(Posh)는 단어 뜻 그대로 '상류층, 귀족, 고급스러움'을 뜻하고 코크니(Cockney)는 런던 동부 하층 노동자들이 주로 쓰는 사투리다.

런던의 명물, 더블 데커(빨간색 2층 버스)를 타면 그 차이를 가장 확실히 또 자주 접하게 된다. 버스를 타고 승객이 요금을 내면 기사가 하는 말이 '타'(Ta). 바로 뒤따라 버스에 올라온 나에게 한국말로 '타'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는 코크니 말로 '고맙다(댕큐)'의 뜻이다. 버스에 탈 때 기사가 앞사람한테 고맙다고 한 말을 한국어 '타(승차)'와 발음이 같다 보니 '버스를 타라'는 뜻처럼 들리는 언어적 유희가 생긴 것이다. 몬



영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한 장면.

## 위화감 있어도 반목은 안해 서로 인정
## 스포츠 뚜렷…축구는 서민, 馬는 상류층

더그린 현상이다. 또 현지말로 '타라(Ta-ra!)'는 우리의 '잘 가~', '나 먼저 갈게' 정도의 가벼운 작별 인사(Bye-bye)말이다.

확실히 구별되는 발음 한 가지는 'A' 소리다. '에이'라 하지 않고 '아이'로 소리 낸다. 'Day'는 '다이' 이고 Rain은 '라인'이다. 핸드백(Handbag)은 좀 과장하면 '한드박'. 그래서 우스개 얘기가 있다. 한국에 온 영국인이 입국 심사대에서 "I came here today"(오늘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심사관이 "I came here to die"로 듣고 '죽으러 왔느냐'고 물었다는 고전 썰이다.

코크니는 또 단어 앞의 H 소리를 빼버린다. House는 아우스, Happy는 애피다. 단어 중간의 'T'도 목구멍에서 끊는 소리로 바꾼다. Butter가 bu'er (버어), Water가 wa'er (워어), Bottle이 bo'le(버을)이 되는 이유다. 미국인들이 흔히 '버러, 워러, 보를'로 말하는 것을 연상하는 대로다. 그래서 영국 Living Room도 Drawing Room이다. 상류층이 쓰는 Sofa도 저소득층은 Couch.

스포츠는 출신계급을 나누는 확실한 문화적 장벽이다. 어퍼 클래스는 말(馬)과 관련된 스포츠(승마, 폴로, 사냥)와 크리켓, 조정, 럭비 등을 즐기고 겨울에는 스위스로 스키를 가는 것이 기본. 워킹 클래스는 축구, 다트, 스누커를 즐기고 주말에 동네 펍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 경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가 생활이다.

당연히 계층 간 위화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반목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길 뿐. 영국인들이 오후 3시 반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의식이 '애프터눈 티 브레이크.' 이때가 되면 상류층은 은쟁반에, 서민들은 머그잔에 차를 마시면 그만이다. 아스콧 경마장에서는 신사숙녀들이 실크해트에 모닝코트, 드레스 등 화사한 극치의 성장을 하고 사교해도, 평민들은 잔디밭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베팅에 열중이다. 윔블던테니스에서도 왕족을 비롯한 초청받은 셀럽들이 로열 박스에서 즐기지만 입장권이 최고 800만 원 넘는 센터 코트에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1번 코트 밖 헨만 힐(잔디 언덕)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누워 딸기를 먹으면서 중계 화면으로 만족한다. '너는 샴페인 마셔라. 나는 소주 마신다'는 식.

**언어, 출신 학교, 문화적 자산이 기준, 명예 중시**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는 사다리가 있고 상류층은 물론 왕족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노동자 출신으로 유소년 시절 식당에서 용돈을 벌었을 정도로 서민적인 환경에서 자란 데이비드 베컴이 기사 작위, 경(Sir)의 호칭를 받고, 왕위 서열 1위 윌리엄 왕자가 전쟁에 참여, 병역 의무를 다 한 것은 상호 존경의 밑바탕이다.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국민성도 중요한 덕목이다.

"계층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어퍼 클래스(상류층)가 될 수 없으며 가난해졌다고 워킹 클래스(노동자 계급)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더 타임즈' 기자 친구는 문화적 자산과 언어, 출신 학교, 인맥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관 등이 이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고침:** 지난 9월호 내용에서 push는 posh로 바로 잡습니다.



LED 조명으로 화려함을 봄내는 포항제철소 야경 . 〈연합뉴스 제공〉

# 박정희, 18년 걸려 산업혁명 이룩

## 선진국 200~300년을 단기간 끝내…새마을운동으로 농업도 탈바꿈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⑮**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 유신에 이르는 길, 대안이 있었을까?

박정희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일탈은 1970년대 3선개헌에서부터 비롯된다. 우선 당시 한국의 국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70년 초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개혁과 소득증대를 위해 박대통령이 직접 챙긴 새마을운동이 개시됐고, 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전국 농촌과 도시, 그리고 수출입 항만을 하루 생활권 시장으로 묶어 농산물과 공산품의 교차수요를 창출하여 전국 균형발전과 수출 도약의 길을 열었다.

72년에는 전 세계를 휩쓴 유가 파동 속에서 8·3 조치로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살리기 경제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전 세계가 빠진 소위 전후 최악의 불황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시대를 오히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본축적의 기회로 대 반전시켰다. 73년 1월에는 한국경제의 수출산업고도화와 선진 중화학 제조 대국을 향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전 세계및 국내 학계, 국내 정치계, 전 각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에 선언하고, 73년 7월 포항제철 완공으로 산업 대국의 밑바탕을 깔아 놓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정책혁명의 연속이었으며 이들 혁명적 산업정책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선진국 기틀이 되었다. 선발 선진국들이 200년이나 300년 걸린 산업혁명을 1961~1979년, 단 20년도 안 된 기간에 이뤄냈다.

이 기간의 국제정치·안보상황은 이상과 같은 엄청난 압축 산업혁명 중인 최빈곤 신생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당시 박대통령의 입장에서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직접 실행한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 후, 미국의 베트남 포기 조짐이 가시화 됐고(월남은 75년 공산화), 71년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및 미·중간 데탕트시대가 열리고, 71년 주한미군 7사단의 일방적 철수로 이어지는 등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물론 이 기간은 북한이 6·25 이후 가장 집요하게 공산화 통일을 위해 남한 침투를 시도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국내 정치 상황 또한 전혀 산업혁명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60년대 말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야권은 3선 대통령 선거에 이르러 그 반공업화, 즉 반 산업혁명적 이념이 공고화되었다. 전통적인 정태적 비교우위이론(지금 농업에 비교적 경쟁우위가 있으면 계속 농업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에 매몰된 국내 학계와 야당은, 새마을운동으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중화학공업화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양 혁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을 추격하겠다는 박대통령의 창발적 균형경제발전 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박대통령은 3선 대통령 선거시 야당 후보의 반공업적이고 친농업적 주장과 나아가 외세 의존적 외교 노선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 데 대해 당선 후 큰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5·16 혁명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온 산업혁명의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한 것이다. 그래도 민주주의 정신을 신봉하고 5·16혁명 이후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틀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 길이 어쩌면 한민족의 중흥을 가져올 확실한 길인 산업혁명을 무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우려가 유신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혁명 과업을 내려놓고 몇 년의 임기를 편히, 조용히 보내고 물러나는 길일 것이다. 야당이 장기 집권용 정치활동이라고 끊임없이 반대한 새마을운동과, 농촌과 농업을 희생하는 외채 망국의 길이며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야당과 전 세계가 반대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포기하면 그만일 일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창발적 경제사상과 통찰력으로는 이미 점령할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항상 현재의 인기보다 사후 성과로 평가받겠다던 그에게 이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었으리라. 목숨을 걸고 5·16혁명을 감행한 사람이 「민족중흥」 이라는 눈앞에 잡힐 듯이 보이는 목표 점령을 버리고 백기를 들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유신은 산업혁명이라는 마지막 고지 점령을 향한 백병전을 앞두고 북한의 남침야욕을 차단하여 국방 안보를 빈틈없이 하고 국민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었던 셈이다. 물론 백병전에서의 희생도 있었지만, 성과는 인류 역사에 금자탑이 되었다.

역사에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일 당시 박대통령이 편한 길을 택했다면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반(反) 공업화 대중 경제론과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세력이 집권했을 것이고 한국의 산업혁명 실현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오늘날 이에 대한 실망도 적지 않지만)의 실현도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조기에 평등민주주의로 직행하여 아직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한언론인회 50년사 본회 발전을 위한 고견 '100자 발언' 원고 보내주세요**

kjc1405@kjclub.or.kr

# 모교 영광…고향 환희…다시 불러내자

고교야구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해마다 진달래꽃이 얼굴 붉혀 봄기운이 생동한다 싶으면 영락없이 고교야구의 열기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고교야구는 봄의 전주곡으로 삶의 환희를 일깨웠었다. 지금의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교야구는 어디에 있는가.

바람 부는 곳이면 그 어디나 고교야구의 단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그 무슨 환각제인양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어 야구장이란 콘크리트 성채에 감금시켰다. 한여름에 살을 태우는 따가운 뙤약볕도 고교야구의 극성을 말리지는 못했다. 왜 사람들은 고교야구에 열광하는가. 그런 물음은 물음이 될 수 없었다. 비록 에러가 속출하고 서툰 방망이질을 해대도 패기에 찬 신선한 플레이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싱그러운 젊음과 모교가 있고 고향이 있기에 사람들은 고교야구에 매달렸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느라 고장 난 기적처럼 목소리가 잠겨버리고 며칠씩 몸살이 나 생고생을 하는 극성파도 있었다. 어쩌다 열이 올라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던지다 보니 애꿎은 옆 사람 박을 터뜨려 피 흘리게 만들고 즉심에 끌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 뜨겁던 열기도 다 식어버렸다. 불현듯 그때의 아쉬운 감상만 떠오를 뿐이다.

아! 고교야구가 어디로 갔는가.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인 1981년만 해도 고교야구의 게임당 입장객은 1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프로야구가 출범한 그 이듬해는 게임당 6천7백 명으로 줄었고 83년에는 5천 명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고교야구의 열기가 식어버렸다.

프로야구 2년 만에 고교야구를 찾는 발길은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3년째에는 해도 너무한다 싶게 게임 당 입장인원은 2천2백명. 81년과 대비할 때 3년 만에 근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프로야구 때문에 고교야구가 망했다고 했다. 프로야구가 아니었더라면 고교야구의 쇠락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고교야구의 몰락을 프로야구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현대는 흥부의 선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 이웃 일본만 해도 프로는 프로요, 고교야구는 고교야구다. 봄철 센바쓰(選拔)대회와 여름철 고시엔(甲子園)대회는 프로와 아랑곳없이 일본 열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

고교야구는 고교야구답게 신선한 충격이 있어야 한다. 프로에 없는 아름다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고교야구는 존재 자체로 그치고 말 것이다. 뜨거운 열기로 가슴을 태우던 그때 그 추억이 이제는 아련한 향수처럼 느껴진다.

지금이야말로 한껏 푸르르고 싶은 고교야구를 되살릴 처방이 필요하다. 야구의 묘미는 구호와 야유로 시작되는 데 있다. "가자. 가자" 그렇게 외치고 고교야구는 시작된다. 그런데 그 고교야구가 정치 구정물을 뒤집어 썼다. 고교선수들이 정치구호를 외친다며 진로를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징계를 내렸다. 이현령비현령일진대 아마추어 학생야구에 정치이념까지 들이댄 것은 시대의 오류로 남을 것이다.

## 서울 성동원두 울렸던 뜨거운 함성
## 김봉연 최동원 선동열 등 대서특필
## 日 고시엔대회처럼 인기 부활 기대

지금의 고교야구는 옛날 고교야구와는 많이 달라졌다. 프로야구의 영향 탓이다. 아마추어 학생야구지만 목표는 프로야구다. 2026년 고교야구는 3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말리그와 4개 전국대회로 진행됐다. 올해 진행된 전국대회는 신세계 이마트배(3월 25일~4월12일)외에 황금사자기(5월 2~16일), 청룡기(6월27일~7월12일), 대통령배(7월18~30일), 봉황대기(8월 7~28일) 등 기존 4개 대회였다.

한국 고교야구는 을사늑약으로 기억되는 1905년에 도입된 이후 1920년까지 학교 야구로 운영됐다. 한성고 야구부로 출발, 경신·휘문·배재 등으로 확산되면서 해방 후 전국대회로 성장했다. 1949년 부산에서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창설되고, 1971년 봉황대기, 1979년 4개 전국 토너먼트 경쟁 청룡기·황금사자기·봉황대기·대통령배 대회가 생겨났다. 1970년대는 고교야구의 최전성기였다. 당시 대표적인 스타로 1971년 경북고등학교의 남우식, 1972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김봉연, 1976년 경남고 최동원, 1978년 부산고의 양상문, 선린상고 박노준 등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고교야구에서는 프로진출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예비스타들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일고 김성준은 투수 겸 유격수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금 120만 달러로 계약했다. 지난해 5월 텍사스로 간 김성준은 마이너리그에서 유격수 겸 투수로 투타를 병행하며 맹활약을 펼쳐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를 연상케 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메이저리그 빅스타 도약의 1순위로 꼽힌다.

고교 유망주로 꼽히던 광주제일고 오른손 투수 박찬민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과 일찍 사인을 해 올해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와 가장 먼저 계약한 선수가 됐다. 반면 194㎝ 94㎏의 건장한 체격과 구속 153㎞의 강속구로 주목 받던 부산고의 하현승은 미국 제안을 거절하고 국내 프로 무대를 먼저 선택했다. 이 때문에 한층 KBO에서 빛을 발할 '고교 최대어'로 꼽힌다.

뉴욕 양키스는 하현승에게 계약금 300만 달러, 한화 약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제안했지만 하현승은 이를 거절했다. 국내에서 먼저 성장해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고교선수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지난 9월13일 대만에서 열린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선발 등판한 하현승은 7이닝 1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제압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하현승은 조별리그 대만전 선발 5⅔이닝 무실점, 슈퍼라운드 일본전 구원 3이닝 무실점에 결승전 완봉승을 더해 이번 대회에서만 15⅔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뉴욕 양키스가 침을 삼킬만한 압도적인 투구였다.

KBO 톱스타의 등용문이자 메이저리그 진출의 통로로 변화하고 있는 고교야구가 다시금 인기를 되찾아 모교의 영광과 고향의 환희를 외치는 멋진 그라운드로 환원되기를 기대한다.




1980년 10월 3일 제3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을 찾은 팬들이 서울운동장 매표소 앞을 가득 채웠다. 2학년 듀오 김건우-박노준을 앞세운 선린상고(현 선린인터넷고)는 이날 세광고를 10-3으로 물리쳤고 다음 날 결승전에서 광주일고에 5-3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기를 차지했다. 〈동아일보DB〉

FC서울 FOOTBALL CLUB SEOUL

# 질풍 독주! '서울의 찬가'부르자

**'서울 독주!' 2026 K리그1의 최대 화두다. 훗날 2026시즌 한국 프로축구를 개관할 때 단연 첫머리를 장식할 듯싶은 두 단어, 네 글자다. 초반부터 불타오른 기세가 갈수록 용솟음치더니 종반에 접어들어서도 전혀 꺾일 줄 모른다. 그야말로 유아독존의 형세라 할 만하다. 2026시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들인 ▲전통 강호의 절대적 우위 약화 ▲승격팀 선전 ▲외국인 선수 무한경쟁 등을 압도하는 게 최대 특징이다.**



FC 서울의 독주가 한층 돋보였던 한판이었다. 지난 9월 12일, 2026 K리그1 우승으로 가는 고비에서 맞닥뜨린 전통 명가 라이벌 전북현대모터스전에서 서울이 승리(2-1)를 거두고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FC 서울은 이미 올 시즌 정규 라운드 1위를 확정지었다. 일찌감치 파이널 라운드 대비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전체 판도를 조망하는 심리적 여유를 갖춘 셈이다. 정규 라운드 4경기를 남겨 놓은 9월 18일 현재(이하), 2위 울산 HD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9승 5무 5패(승점 62)로, 승점 47점(14승 5무 10패)의 울산에 15점 차로 앞서 있다. 곧, 남은 4경기를 서울이 모두 지고 울산이 전부 휩쓸어도 승점 3점 차(62-59)로 우위에 선다.

K리그는 승강제 도입(2013시즌)에 앞서 2012시즌에 스플릿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때부터 한 시즌은 정규 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로 나눠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각 팀은 정규 라운드 33경기와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엮어 총 38경기를 치른다.

그렇다면 "서울이 2026시즌 K리그1 우승컵을 거의 손안에 움켜쥐었다."라는 표현도 큰 무리는 없을 성싶다. 서울이 남은 9경기(정규 4+파이널 5)에서 반타작 승부를 펼쳐 4승 1무(승점 13)의 전과만 거두면, 울산이 앞으로 9연승의 '기적'을 연출하더라도, 패자(覇者)로 군림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은 승점 75를 확보해 정상에서 포효한다. 반면, 울산은 승점 74에 그쳐 등정을 눈앞에 두고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울이 9경기를 남기고 매직 승점을 15점으로 만드는 엄청난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올 시즌이다.

만일 정상에서 환호하면, 서울은 K리그1 최다 우승기록 2위에 올라선다. 현재 6회로 1위 전북 현대모터스(10회)→ 2위 성남 FC(7회)에 이어 3위에서, 한 층계 올라서서 성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제는 쇠락해 K리그2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성남을 차치하면, 서울이 전북과 함께 한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명가로서 '쌍벽(雙璧)'을 이루고 있음을 뽐내는 영광의 순간을 빚어낸다.

이번 시즌 29라운드가 펼쳐질 때까지, 서울이 1위에 오르지 못한 적은 단 세 번에 불과하다. 1라운드(3위)와 3~4라운드(2위)에 잠시 숨을 돌렸을 뿐, 2라운드에 이어 5라운드부터는 '1위 질주'를 거듭해 왔다.

## 최다 득점- 최소 실점 공수균형 탄탄 선두 정승원 스타덤…울산 추격 완전히 따돌려

특히 공격력에서, 서울이 왜 이 같은 폭주를 할 수 있었는지가 엿보인다. 55골(경기당 평균 1.9골)을 터뜨리는 막강한 공격력은 단연 돋보인다. 물론 12개 팀 가운데 최고다. 45골(경기당 평균 1.6골)로 이 부분 2위에 자리한 대전 하나 시티즌을 한참 따돌렸다. 실점도 최소다. 23실점(경기당 평균 0.8실점)으로 경기당 1골도 내주지 않는 '자린고비 수비력'을 과시했다. 그만큼 공수에서 탄탄한 균형을 K리그1 천하에 떨쳤다.

서울의 막강 공격력 핵심엔 클리말라와 정승원이 존재한다. 클리말라와 정승원은 각각 12골과 8골로 득점 레이스 공동 2위와 공동 7위를 달리며 득점원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도움에서 공동 3위(6개)에 오른 정승원은 공격 포인트에서도 공동 4위(14점)에 오르는 인상적 몸놀림으로 '모레노호' 출범 멤버에 발탁되기도 했다. 지난 9월14일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 지휘봉을 잡았다.

### 쇠락 기미 보인 전통 강호 틈새 파고든 승격 팀 돌풍에 눈길

전북, 서울, 울산은 2010년부터 K리그1의 불문율로 고착한 듯한 절대 3강 형세를 이뤄 왔다. 열여섯 시즌(2010~2025) 패권을 세 팀이 번갈아 가며 가져갔다. 그중에서도 전북이 '절대 강자'로 성가를 드높였다. 5연패(2017~2021시즌)를 비롯해 9회나 정상에서 사자후를 터뜨렸다. 한 번의 3연패(2022~2024시즌)를 이룬 현대와 서울(2010·2012·2016시즌)이 각각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우승의 환호성을 올릴 수 있었던 팀은 포항 스틸러스(2013시즌)뿐이다. 얼핏 보면 2026시즌도 마찬가지 그림이다. 서울이 9부 능선까지 올라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들 전통 강호의 절대적 우위성은 다소 약화한 듯한 느낌이다. 2~3위 울산과 전북(승점 43)은 서울을 추격하기보다는 중·상위권과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포항은 8위(승점 37)로 뒤처져 있을 정도다. 2위 울산부터 5위 강원 FC(승점 42)까지 5점 차 이내로 숨가쁜 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 틈을 승격 팀 인천 유나이티드와 부천 FC 1995가 파고들었다. 인천은 7위(10승 7무 11패·승점 37)에, 부천은 10위(7승 11무 11패·승점 32)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인천은 세 차례씩(6·10·13라운드)이나 5위로 치고 올라갔을 만큼 존재감을 보였다. 부천은 2라운드가 끝나고 1위에 나서는 '깜짝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히 '승격 후 잔류'에만 머물지 않고 중위권 경쟁에 뛰어든 점이 이채롭다. K리그2에서 올라와 2025시즌부터 K리그1에 몸담은 FC 안양도 9위(8승 11무 10패·승점 35)다. 역시 초반 기세(1~4라운드: 2~4위)가 매서웠다.

외국인 GK 등록 허용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점도 이번 시즌에 눈길을 끄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비록 경기 엔트리 등록·출전을 5명으로 제한하긴 했어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구단 간 외국인 선수 영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 선수의 경기력 영향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경쟁과 공존이 승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K리그1이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엿볼 수 있었던 2026시즌이었다.

최규섭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한글학회 홈페이지 캡처.

# 한글 '1자=1음' 철칙…하루 배우면 술술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10월 9일은 국경일인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한글이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인 데에는 한류 덕분이 크다. 지구촌 곳곳에서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떼창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며 한국말에 관심을 갖더니 자연스레 한글로 눈을 돌린 것이다. 우리도 예전에 팝송을 따라 부르며 영어를 배웠지만 역방향인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만큼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하다.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로 시작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등 여러 분야로 확산는 양상이라 한국말과 한글 배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에선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배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유독 한글은 꾸준한 급증세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세계 저명 학자 상당수가 입을 모아 한글의 우수성을 칭송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실용성이다. 배우기가 아주 쉽다.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인 기본 자모 24자면 끝이다.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기여한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슬기로운 이는 아침나절이면 익히고 어리석은 이도 열흘이면 깨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어느 문자가 이토록 배우기 쉽단 말인가.

두 번째 장점은 독창성과 과학성이다. 한글은 다른 문자를 빌리거나 본뜬 게 아니고 우리 음운 체계를 분석해 완전히 새로 만든 표음 문자(表音文字)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해례본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밝힌 문자 체계 해설서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창제자, 창제일,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하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의 명으로 만든 파스파 문자가 있었다지만 원(元) 멸망 후 급격히 쇠퇴해 이제는 유명무실하다. 해례본에 따르면 자음은 발음 기관을 형상화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형태 등이다. 여기에 ㄱ→ㅋ, ㄴ→ㄷ→ㅌ처럼 획을 추가해 거세거나 강한 소리를 나타냈다. 모음은 천(天)·지(地)·인(人)을 각각 상징하는 '· ㅡ ㅣ'를 기본 삼아 획을 더하거나 조합해서 만들었다.

## 24자모 표음문자 1만1,172음절 엄청
## 들리는대로 적고 읽어 AI시대에 적격

셋째 장점은 각 자모가 고유 음가를 지닌다는 점이다. 같은 표음 문자라도 영어는 'a'의 발음이 예닐곱 개나 되는 등 한 문자를 여러 음으로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글은 'ㅏ'를 'ㅓ'나 'ㅣ'로 읽는 법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음도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언제나 같은 음이다. 24자를 익히는 순간 자기 이름이든 뭐든 쓸 수 있고 거리의 간판을 쉽게 읽는 것도 그래서다. 표의 문자(表意文字)인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나 프랑스어도 어림없는 일이다. 이들 언어는 철자와 발음을 미리 알지 못하고 쓰거나 읽으면 틀리기 십상이다. 넷째는 확장성이다. 기본 자모를 아래위나 옆으로 붙여 글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한글 초·중·종성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1,172음절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5분의 1 정도만 쓴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 목록이 아니라 글자를 만들어 내는 체계인 셈이다.

세종은 백성이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애민 정신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나 비단 우리말의 표기만 겨냥하지 않고 중국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를 적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정인지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이 홰치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적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뛰어난 문자를 만든 세종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언어학자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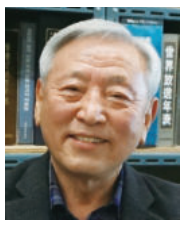
전 세계의 언어는 7,000개를 넘지만 문자는 150여개 뿐이고 그나마 소멸 위기에 놓인 문자가 적지 않다.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는 '세계 문자'는 없지만 굳이 꼽자면 알파벳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수많은 언어가 알파벳을 쓴다. 한자도 발음을 표기하는 병음으로 알파벳을 채택했다. 알파벳은 그러나 치명적 결함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 문자가 여러 음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보고도 제대로 못 읽고 같은 발음도 사람마다 달리 쓴다면 어찌 세계 문자라 하겠는가. 그 훌륭한 대안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은 '1자=1음'이 철칙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쓰는 24자만으론 한계가 있다. 영어의 'v'와 'f' 등을 표기할 수 없고, 'r'과 'l' 구분도 안 된다. 주시경 선생은 일제에 나라를 잃는 황망한 상황에서 민족의 넋인 우리글을 급히 살리느라 대외 교류가 별로 없던 시절에 잘 안 쓰던 4자를 빼고 한글로 간추렸을 게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어가 필수인 시대다. 그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려면 28자가 온전히 있어야 한다. 사라진 4자와 순경음 등을 되살리는 한편으로 'f'와 'p'를 모두 'ㅍ'으로 적는 등 결함투성이인 외래어표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들리는 대로 적고 적힌 대로 읽히는' 한글은 뛰어난 구조적 논리성과 디지털 적합성으로 인공지능(AI) 시대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문자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한글의 쓰임새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알파벳을 능가하는 세계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글의 몇 안 되는 약점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글을 명실공히 세계 문자로 만들어 때마침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민족적 자존심도 드높이는 일에 너나없이 힘을 모을 때다.

# ‘고지식’이 칭찬? 문해력 큰일났다

## 디지털 기기에 빠져…연간 국민 10명 중 6명은 책 한권도 안 읽어



이규섭
본회 회우·전 사무총장



문해력 위기의 핵심 과제는 독서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 위치한 도서관에 책은 많아도 읽는 사람은 드물다. 〈사진 이규섭 회우 제공〉

### ■AI시대 문해력 위기

한국 학생 문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OECD가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다.(조선일보 2026년 9월 9일자 1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저하가 국제 비교 지표에서 현격하게 뒤처졌다. 긴 글을 한 페이지 끝까지 읽지 못하고 핵심 정보를 추려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니 문해력의 심각한 위기다.

### 문해력 OECD 평가서 역대 최저

PISA는 3년마다 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평가다. 지난해 평가에는 91개국 학생 76만명이 참여했고, 우리나라는 196개교 6,85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읽기와 수학·과학 점수 상위권 국가는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일본이다. 교육계에서는 쇼츠(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시청과 인공지능(AI) 이용으로 문해력이 떨어진 것이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한다.

문해력(Literacy)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다.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활용해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이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뒤 나이가 들어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려가 깊어진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15세 이후에도 문해력이 계속 성장하는지 보기 위해 PISA 결과를 만 16~6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와 연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만 30세의 평균 문해력이 만 15세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문해력의 붕괴가 지속적인 상황으로 드러났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인 ‘고지식’을 칭찬인 줄 아는 등 문해력 붕괴의 경고등은 초·중·고교와 대학, 직장 등 우리사회 곳곳에 켜졌다. 한국교총이 한 언론사와 공동으로 초·중·고교 교사 95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1%가 “과거에 비해 학생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긴 글 읽기를 ‘구세대 유물’처럼 취급한다”며 “이러다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초등학생. 〈이규섭 회우 제공〉

## 국제 성취도 15세 평가서 가장 낮아
## 긴글 읽기 외면…독서교육 강화 시급

디지털 기기와 AI의 발전, 숏폼 중독 등으로 깊이 있게 글 읽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민독서 실태조사 2025’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은 38.5%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책을 1년간 1권도 읽지 않은 ‘책맹’이다.

### AI의 오류 답변 그대로 받아들여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는 단편소설 쓰기 과제를 채점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학생이 1960년대 서울을 묘사하면서 ‘거리의 전광판 뉴스 소리에 사람들이 멈춰 섰다’고 썼다. “당시에는 전광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학생은 “챗GPT가 알려 준거라 틀릴 리가 없다”고 우겼다. AI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처럼 믿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했다.

대학가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한 전문대학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검사 진단을 실시한다.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 매년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데도 평균 점수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성인도 예외는 아니다.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소통이 안 된다며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교육을 하는 직장도 있다. 한 공공기관은 직원 연수 때 ‘문해력 강의’를 도입했다. 업무 메일이나 보고서의 요지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자주 쓰는 ‘재고(再考)를 부탁드린다.’는 기본 어휘조차 몰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아 빚어진 고육지책의 선택이다.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해력 학원을 찾는 성인도 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학원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대1 문해력 강의’를 한다. ‘상사의 지시를 이해 못해 왔다’는 20대 신입사원부터 “어느 순간부터 보고서 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간부 등 다양하다. 스마트 폰을 쓰고 자라며 긴 글 읽기를 꺼리게 된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독서는 국가 책무’ 교육법 명시

일선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 활동을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봤다. 문해력 개선 방안에 대해 71.4%가 ‘독서 활동 강화’를 꼽았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 방법으로는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수업에 독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문해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7월 교육부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독서가 특정 과목,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독서 교육 강화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 볼 일이다.

# 사악한 지도자 선조·인조 재위가 재앙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우리 민족사에서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빠뜨린 임금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조의 선조(宣祖)와 인조(仁祖)를 들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조손(祖孫)간이다.

예나 이제나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으면 국정은 표류하게 마련이다.

조선왕조는 27명의 국왕 가운데 선조의 재위 기간만큼 다사다난했던 적도 없었다. 그의 재위 중에 동서당쟁이 시작됐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재위 41년 내내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은 도외시한 채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비정상적 즉위 과정에서 비롯됐다.

선조는 명종(明宗)이 후사없이 죽는 바람에 조선왕조 사상 최초로 방계 승통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중종(中宗)의 서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가 낳은 아홉째 아들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니 정상적 상황이라면 국왕 후보에도 끼지 못할 서열이었다.

그런 까닭에 선조는 재위 내내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으며 이는 결국 신하들과의 불화, 또 아들 광해군(光海君)과의 불화로도 나타났다.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되거나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자들, 시국의 혼란을 틈타 어부지리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처럼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던 만큼 선조의 왕권 유지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피란을 가면서도 그는 어제는 동인, 오늘은 서인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당쟁을 자신의 왕권 유지에 악용했다.

또한 장수들을 라이벌로 의심하고 시기해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을 죽이고 이순신(李舜臣)과 곽재우(郭再祐)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서인 황윤길의 보고를 무시하고 동인 김성일의 보고를 수용함으로써 '무비유환'의 재앙을 당했다. 전쟁의 조짐이 조금만 있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 상식이거늘 선조와 동인들은 왜적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은 무사할 줄 알았을까.

선조는 재위기간 중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노릇 못해 먹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양위극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물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쇼였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멸망의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유비무환의 교훈을 무시해 또 병자호란을 당했다.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서자 정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나 광해군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왕위에 올랐다. 인조는 시대를 역행한 친명사대주의를 추구하는 서인의 추대로 즉위한 만큼 후금(청나라의 전신)과는 적대관계를유지했다. 후금은 조선과 명나라가 미개한 오랑캐라고 깔보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다.

인조 14년(1636) 청 태종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청 태종의 즉위식에 마지못해 참석한 조선 사신들은 "하늘에는 두 해가 있을 수 없듯이 두 종주국을 섬길 수 없다"면서 절을 거부했다. 측근에서 목을 따야 한다고 펄펄 뛰었지만 청 태종은 두 사신을 돌려보내고 조선에 용골대를 보내 인조를 책망하는 한편, 이제부터는 형제지국이 아닌 군신지국의 예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정은 명분론이 우세해 인조는 청국 사신을 만나주지도, 국서를 받지도 않았다. 심지어 사신을 죽여버리자는 말까지 나오자 용골대는 도망쳐 청 태종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굴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삼전도비(三田渡碑·사적 101호)가 11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송파구는 현재 석촌동 289-3번지의 근린공원에 있는 삼전도비를 원위치와 가장 가까운 석촌호수 서호 언덕으로 옮기는 공사를 2010년 4월에 마무리했다.

## 선조 비정상적 즉위로 내내 정통성 콤플렉스
## 인조 유비무환 무시 胡亂 초래…아들 독살도



화가 치민 청 태종은 그해 12월1일 몸소 10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이것이 병자호란의 시작이었다.

청군은 12월 10일 안주, 13일 평양, 14일 개성 순으로 무인지경을 가듯 남하했다.

인조 15년(1637년) 1월30일. 인조는 소현세자와 함께 남색 군복차림에 백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을 나서 한강변 송파나루 삼전도의 항복식장으로 내려갔다. 인조는 100보를 걸어나가 먼저 맨땅에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 頭), 즉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리며 세 차례 절을 했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자에게 하루에 열두 차례나 큰절을 올렸으니 치욕도 그런 치욕이 다시없었다.

그렇게 사상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한 인조는 전쟁이 끝나자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왕권 안보의 걸림돌, 즉 정적으로 여겨 독살했으며 며느리 강씨와 두 손자까지 죽여버렸으니 참으로 비정하고 악랄한 아비요, 시아비요, 할아비요, 임금이었다.

나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천성이 잔인하고 교활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사안마다 좌고우면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 존재 자체가 재앙 같은 지도자가 끌고가는 나라의 앞날에 희망은 없다. 조선왕조 500년은 우리 역사 5,000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 많은 나라였고, 선조와 인조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었다. 그것이 통렬한 역사의 교훈이다. 이런 사악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와 겨레에 미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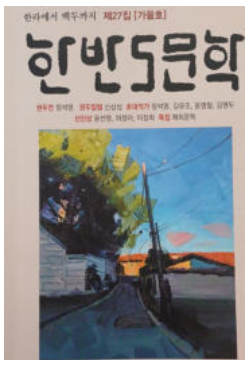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투어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 회우동정

## 장석영 회우, 문학지에 권두언 자작시 각각 게재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한국문학신문 대표)이 한반도문학 가을호 (제27집)에 'AI시대의 문학인의 사명'을 권두언으로 실었다. 한국국보문학 9월호엔 이달의 초대시 10인선에 선정, 자작시 '가을여인'을 게재했다.




## 김용발 회우, 가평 자라섬 마라톤 5km 완주記



휴일인 9월 20일 제 19회 가평 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필자가 속한 송파마라톤클럽도 관광버스로 아침 6시 가평을 향해 출발했다. 이 계절, 가평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세속의 때를 씻어내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해마다 대회를 주관하는 가평군체육회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20여 년 전 송파마라톤클럽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체력에 맞게 천천히 석촌호수를 한 바퀴씩 돌았다. 집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근처여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면 4㎞, 두 바퀴 돌면 6.5㎞였다. 내 나이 60이 넘어 이렇게 시작한 마라톤은 그간 수십 회의 하프코스와 10㎞ 대회 참가로 이어졌다. 80이 넘은 요즘엔 뛰는 대신 주로 올림픽공원을 걷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수많은 마라토너들로 북적였다. 나는 5㎞에 참가했다. 자라섬-가평고교-옥목교-자라섬을 돌아오는 코스였다. 숨이 차고 지치면 걷다가 다시 뛰었다.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황영조 선수는 건강을 위한 달리기라면 10㎞ 이상은 뛰지 말라고 권유했다. 천천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속도가 붙는다. 저 멀리 송파마라톤 클럽 텐트가 보였다. 또 완주 성공이다! 우리 일행은 소양강변으로 차를 몰았다.

제기차기 대회와 제비뽑기 등으로 푸짐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았다. 역시 인생은 '마라톤'이다.

## 강성구 회우, 3회 화성영화제서 대회사 선언




영화의 미래를 밝힐 열정과 창의의 축제, 제3회 화성영화제(2026.9.12.)에서 김남진 감독의 〈나성에 가면〉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화성시민캠퍼스 내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에서 열린 이 영화제는 221편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2021년 '폰영화아카데미'로 시작해 2024년 '화성영화제'로 명칭을 바꾼 이래 본격적인 단편 영화제로 발돋움했다. 화성영화제는 불과 3회 만에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독자적인 영역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첫해 107편에 불과했던 출품작이 이번엔 인공지능(AI) 영화, 실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총 221편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강성구 대회장(전 MBC 사장; 본회 회우)은 대회사에서 "영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는 삶의 거울이다. 최근 감명깊게 본 영화 〈오디세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이곳에서도 피어나길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수상자들 중에서 세계적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같은 명감독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창작자들을 격려해 박수를 받았다.

##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6.8.26 ~ 2026.9.22〉〈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회우가 낸 새책

## 김용원의 소소한 건강관리법, 건강인생 생활습관만 바꾼다면




건강 보조식품도 먹는 게 없다. 병원에 가거나 입원한 일이 없다. 1일 2식, 아침은 당근, 사과, 방울토마토를 믹서에 갈아 만든 주스 한두 잔으로 대신한다.

음식은 아무거나 먹는다. 점심 식사 때 반주는 필수. 적정량을 즐겁게 마신다. 아침 6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엔 잠을 푹 잔다.

한 달에 한두 번 골프장,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직접 운전해 예술의전당, 롯데아트홀, 음악회나 미술관, 화랑 전시회를 보러 다닌다. 90세를 넘긴 저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쓴 건강 가이드북이다.

**김용원 지음, 푸른솔 4×6판 159페이지 값 12,000원**

## 정읍선언 대한민국 위대한 시작, 이승만 독트린




소련 스탈린이 김구를 이용한 결정적 장면을 보라. 미·소 공동위에서 실패한 남북한 친소 통일정부수립 계획을 1948년 평양회의에서 결의한 남북공동성명서에 담아 서명시켰다.

이승만, 김성수 등 자유민주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서명한 남한 정당들만 김일성 공산당과 연합키로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정부수립론은 공산화통일이었다. 이를 일찌감치 간파한 이승만이 1945년 귀국 즉시 '소련추방-남북통일'을 선언하고 1948년 정읍선언을 유엔 결의안으로 세계화시킨 전력을 보라. 정읍선언은 이승만 독트린 건국혁명의 원동력이다. 이책은 지난 80년간 정읍선언에 씌워졌던 누명인 '분단의 원흉' 껍질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도약대로 정립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펴낸다. 필자의 말이다. 인보길 지음.

**도서출판 기파랑 318면 4×6판 값 19,000원**

## 오경자 수필집, 마음에 있으면




수필을 왜 쓰십니까? 필자가 필자에게 묻는다. "일흔 고개를 넘으며 보는 세상,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가슴 속에서 밀고 올라와 참지 못해 글을 쓴다.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게 좋아서 글을 쓴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일중에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가슴에 차오르는 그리움 같은 감회를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글을 쓴다고 했다.

저자 오경자는 고려대 법대, 이화여대 대학원을 나와 경제통신사 기자를 역임했고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고문, 고려대 미래교육관 수필창작지도교수를 지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이다. **203면 신국판 교음사 값 15,000원**

##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김기동**회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유원서초아파트 103동 610호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동철** 회우 별세 2026년 8월30일 향년 88세
**이종문** 회우 별세 2026년 9월15일 향년 84세
**이준기** 회우 별세 2026년 9월11일 향년 91세
**이 철** 회우 별세 2026년 9월14일 향년 94세
**이종세** 회우 부인상 2026년 9월10일
**이 휘** 회우 부인상 2026년 9월14일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책임 서 이 석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2026 서울어텀페스타
SEOUL
AUTUMN
FESTA
9.18.–11.29.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
Seoul in Autumn,
Art Alive
SEOUL
MY SOUL